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109차 화요집회**	**사무총장** 박주현 변호사(010-5687-0926) **대 변 인** 유정화 변호사(010-8500-8756) **사무처** 02-599-4434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대북전단금지법의 조속한 폐기 및 위헌결정을 촉구한다

- 대북 라디오 금지음모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1. 5. 4(화) 11:30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1. 북한은 2일 최근 국내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고,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2. 이미 지난 4월 15일 미국 의회 렌토스 청문회에 이어 지난 4월 22일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수호자 특별보고관 등 4명의 특별보고관들이 처음으로 합동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3.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월 18일 확인됐다.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까지 금지를 추진하는 의혹이 있다.

4. 미 바이든 정부와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함은 물론,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등 27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신속히 위헌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5. 이번 제109차 화요집회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 5. 3.

한변 및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